

투데이 칼럼

임시건설저장시설은 위험하다

고 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내 화두는 단연 임시건설저장시설이다. 이 시설이 위험하다는 주장과 안전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필자는 임시건설저장시설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핵 폐기물) 임시건설저장시설은 대표적으로 원전 부지 위에 세워지는 하얗고 동그런 기둥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일로 형태를 띠고 있다.

건설저장은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냉각시키고,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해 방사성물질과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원리이다.

준비단 내 원전소재지축 위원들을 위주로 한 상당수 위원들은 건설저장 시설이 안전하므로 원전 반경 5km 이내 원전소재지의 문제로 한정해야 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건설저장시설은 고준위 핵폐기물 주변 시민단체 축 위원들은 임시라고는 하지만 중간처리보다 영구처분 시설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할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아래 3가지 이유로 임시건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식저장시설은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핵폐기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별개의 정상적 저장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준위 임시 시설이 원자로에 딸린 관계시설로 보아 안전 경계 범위를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20~30km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건설저장시설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 일상생활과 완벽하게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며, 따라서 안전에 있어 원전 반경 5km 이내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임시건설저장시설 또한 인간이 만든 시설이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콘크리트로

미세한 틈새 발생과 용기 부식 등 각종 사고나 보수의 과정에서 방사선과 방사능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다.

건설저장시설 수명이 50년이라고 해서 고장 없이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수명 보증기간 10년 동안 여러 고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건설저장시설은 임시 시설이면서도 동시에 중간처리시설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간처리장이나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임시는 임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간처리시설이나 영구처분장과 같은 완벽한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저장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오염물질이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그동안 축적된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있어 실패 원인을 지역주민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또 다시 공론화에 실패하여 많은 예산과 세월을 허비한다면 국민들은 그 원인을 찾고 갈등관리 책임을 묻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임시라는 용어로 건설저장시설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논의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준비단과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독자제언

방향지시등 미리켜기 생활화하자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확립 및 교통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향지시등 미리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매년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을 보면, 사망자의 40%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나오고 있다. 차량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리켜기를 통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범위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 간에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배려 있는 행동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등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작동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의거,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출 퇴근시간 등 차량집중 시간대에 경찰협력단체(유관기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 등)와 합동 캠페인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및 안전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주 시민 모두 방향지시등 미리켜기를 생활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였으면 한다.

박인배 원산서 교통안전계 3팀장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물에 잠긴 베네치아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람들이 물에 잠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이탈리아를 강타한 폭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베네치아 도심의 75%가 물에 잠겼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새만금 규제 풀고 글로벌화 속도를 내야

새만금의 현주소에 주목해야겠다. 전북도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곤란하다. 오래 전에 새만금과 관련해 조사된 것이 있다.그런데 그게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새만금 관련 지역의 기초 단체장들이 새만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말이다. 일반 시민이 그렇게 말해도 안 될 일인데 지역을 이끌겠다고 나선 이들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알짜배기 큰 일거리는 외지 건설업체들이 다 싸늘이하고 도내 건설업체들은 겨우 겨우 이삭줍기나 하고 있기에 그랬을 거라는 짐작만으로는 남득이 잘 안되었던 것이다.

새만금의 규제를 풀고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요란하는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연한 언급의 뒷맛이 아주 씁쓸하다.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와야 마땅한 언급이 왜 이제서야 나오느냐는 물음이다. 새만금의 원대한 미래 목표가 '이리올'이고 '동북아의 허브'라고 해놓고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니니 하는 운운은 생똥맞아도 너무 생똥맞다. 그래 여기 다시 말하거나와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새만금 사업이 제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 너무 앞장해가지고서는 이제 도민의 믿

음을 얻을 수 없다.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고 얼마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던 게 다시 생각난다. 그게 오래 전의 일인데도 그렇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현장으로 내려와 밝은 소식을 들려준 것도 생각한다. 역시나 오래된 옛일인데도 그렇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국제 공항 건설과 신항만 건설이며 세계 폼베리 대회 개최 이전에 교통망을 완공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 해야 한다.그렇다. 전북도는 예전과 확연히 다른 새만금 개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더 강해져야 한다. 말로만 글로벌을 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화를 성공시키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역할 중대를 도모해야 한다. 저번에 이태원 여당 대표가 새만금 국제 공항 건설이 불가하다고 말했지만 그에 기죽지 말라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약한 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 오히려 전북도는 대통령이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둘 일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앞장 서겠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겠다.

지금은 고용 안정 도모해야 할 때

지금은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지역경제의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용을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해결해야 할 속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한 나날이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오늘이 아닐 수 없다.

저번에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먼저 술선수 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지 싶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 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겠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

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했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을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북도는 얼마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둘러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두고 이마를 짚어야겠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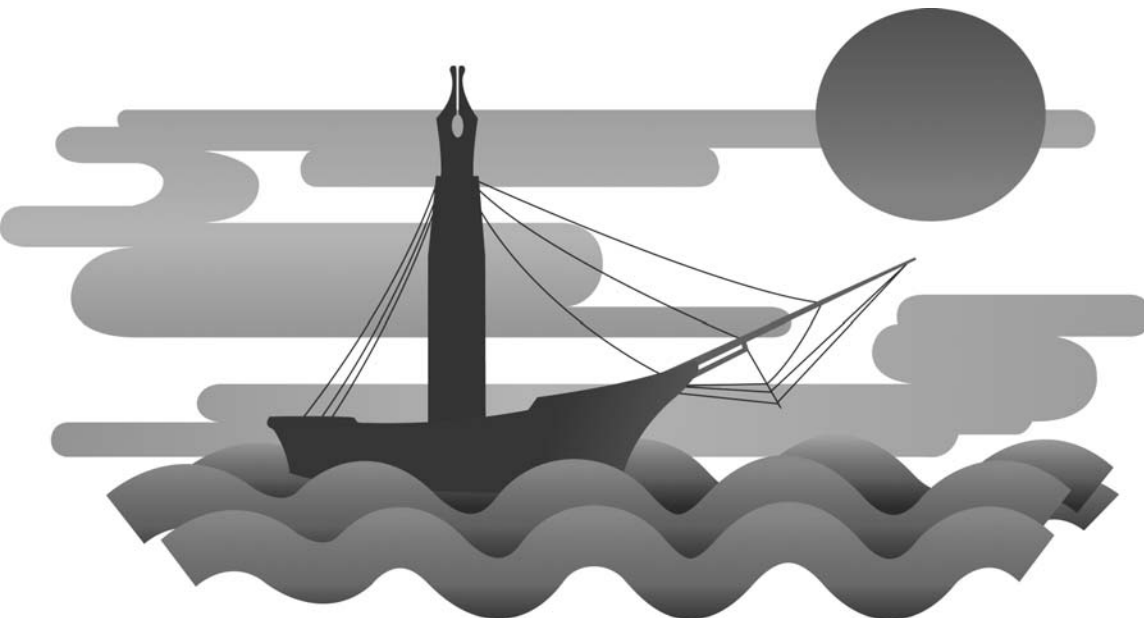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